

## 농촌지역 여성 문화권에 관한 탐색

오미란\*

### 〈국문초록〉

문화가 국가경쟁력을 담보하리라는 ‘문화의 세기’가 본격화 하면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간 여성문화에 대한 연구는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여성주의 문화에 관한 이론적 해석, 섹슈얼리티 담론에 관한 연구 등이 주된 대상이었다. 그러나 농촌지역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권리로서 지역문화에 대한 여성 문화적 권리라는 측면은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이다. 현재 농촌지역은 여성문화권의 사각지대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 여성문화권의 획득을 위해서는 첫째, 농촌지역 문화격차 해소, 둘째, 문화 권력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수문화(이주여성, 젊은 여성, 노인여성 등 다양한 하위문화 층위 반영)의 발전을 위한 지원의 확대, 셋째, 전통문화의 보호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비영리 문화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지원과 문화조직 육성이 제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문화에서 여성문화권 실현을 위한 문화 행위주체 중심의 문화적 지원과 소규모 대안적 문화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지역개발사업, 문화격차, 여성문화권, 문화지원권, 문화향수권

\* 전남여성플라자 정책연구실장  
rff8364@hanmail.net

『젠더와 문화』 제2권 2호(2009): pp.79-106  
© 2009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 1. 들어가는 말

문화야 말로 국가경쟁력을 담보하리라는 ‘문화의 세기’가 본격화 하면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 권리’는 아직도 생소한 개념이다. 문화는 삶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면서도 다른 영역과 달리 문화적 권리의 내용이나 합의, 쟁점 등이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는 경우는 여전히 미약하다. 그 동안 ‘문화적 권리’가 본격적인 사회담론으로 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낮고, 문화를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이라는 요인에 가리워진 소수 특권층만이 향유하는 고급문화로 인식되거나, 권력의 ‘시녀’ 혹은 도구로 활용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 종속적 위상으로 인식하는 경향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90년대 들어와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상품의 미학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문화의 고부가가치 상품영역 생산성 확대 등 본격적으로 문화를 자본주의의 적극적 생산수단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되어 왔다. 한편에서는 문화를 자본주의의 수단화 하는 문화산업론적 관점과 달리 압축적 근대화를 반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의 새로운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적 접근에 대한 시도와 논의들이 높아지고 있다<sup>1)</sup>.

그 간 여성문화에 대한 연구는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여성주의 문화에 관한 이론적 해석, 섹슈얼리티 담론에 관한 연구 등이 주된 대상이었다. 그러나 동일한 공간 내에서 여성문화의 차별적 현상인 도시-농촌의 격차, 세대간 여성문화 격차 등 다양한 층위에서 여성의 문화적

1) 근대화에 대한 성찰로서 ‘빠름’ ‘획일화’에 대한 반성으로 ‘느림’ ‘손제품’ 등에 대한 새로운 삶의 양식 및 선호도, 새로운 공동생활 양식을 실천하는 집단이 증가하고 있음.

권리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농촌지역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권리로서 지역문화에 대한 여성 문화적 권리라는 측면의 접근은 전통과 현대, 도시-농촌, 세대간 격차라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이다<sup>2)</sup>.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은 지역의 역사문화 유산이 지역발전의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관심이 증대되었고 최근에는 각 지자체 등이 앞장서서 역사문화를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이래 상징자원, 관광자원 등의 지역마케팅의 재료로서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민의 문화상품 구매력을 자극하기 위한 지역문화 마케팅 전술이 강화되었다는 의미가 지역에 살고 있는 문화의 행위주체로서 주민의 문화권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이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성문화자원에 대한 관심은 그 동안 전통적 생활양식에서 여성의 역할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모시-길쌈, 김치-음식 명장 등)이 문화적 자원으로 발굴되거나, 심청, 바우덕이, 논개 등 여성 설화적 인물들을 상징자원화 하고, 지역의 역사문화를 해설할 역사문화해설사에 여성인적 자원이 육성되는 등 여성의 문화유산이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들은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이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고, 전체 지역여성(농촌지역)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의 고양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의 여성의 문화적 권리를 논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여성의 특성과 문화적 권리 현황에 대한 분석과 접근법 개발 및 개념적 합의가 필요하다.

2) 최근 이에 대한 연구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역사문화 유산의 현황과 지역문화자원으로의 활성화 방안』(2004)와 「전통문화계승에 있어서 성차」(오미란, 2007) 등의 논문이 있다.

문화에서 권리의 진작과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양상을 띠는가에 대한 인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는데 창조성을 중시하는 문화주의적 관점, 이데올로기론의 관점, 권력/욕망 이론 관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강내희, 2007). 문화주의적 관점에서 문화적 권리는 문화의 소유나 향유의 기회획득 여부의 문제이다. 이데올로기론은 사상의 자유=문화적 권리로 보는 것이고, 권력/욕망 이론에서는 문화는 욕망이나 쾌락 생산의 배치문제로 보기 때문에 표현의 문제에 더 주목한다. 또한 최근 들어 경제자본 뿐만 아니라 사회계급간 문화자본의 불균등한 배분도 계급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도 문화자본의 형성과정 자체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다.

1998 스톡홀름의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문화정책의 목적을 첫째,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요소, 둘째, 문화생활의 창의성 증진과 참여확대, 셋째, 문화유산 보호와 문화산업 발전, 넷째, 문화다양성 진전, 다섯째, 인적자원과 재정자원 확대로 문화발전 공헌(정철현, 2005: 263)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미를 해석하면 문화권이란 첫째, 문화향유권(기회확대), 둘째, 문화지원권(문화지원받을 권리) 셋째, 보호권과 발전권(지역의 특수성의 인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여성문화권을 문화시설 향유, 현대적 문화의 수용(프로그램) 등의 외형적 분류법에 따라 설정할 것인가? 아니면 여성주의적 문화의 접근 및 활용에 관한 시도를 포괄한 실천적 의미에서 여성주의 문화권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범주와 연구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범주를 농촌=시·군(인구 20만 미만을 포함한)단위로 제한하고, 여성문화권=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적 프로그램·시설 등에 대한 접근권 및 향유를 포괄하는 문화주의적 접근의 의미로 '농촌지역 여성문화권'이란 영역을 '여성문화권'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 2. 농촌지역에서 여성문화권의 현실

여성문화권을 얘기하기 전에 여성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여성문화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과 구별 또는 차별화된 집단으로서 여성이 공유하는 생활세계의 체험과 문화라고 정의하는 과점이 있다(한국여성연구소, 1999: 82). 여성들 간에도 계층, 인종, 지역 등의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다움에 대한 규정은 여성들의 공통된 경험과 문화를 형성하게 한다. 이러한 견해는 가부장적 체계 내에서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적공간에서 일어나는 여성세계의 문화로 보는 관점은 여성문화의 특성을 밝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여성을 문화에 대한 수동적 존재로 이해하고 지배문화가 제공하는 여성의 영역을 강조할 우려가 있다. 다른 하나의 견해는 여성에게는 고유한 본성인 여성성이 있으며, 그것의 발현이 문화라고 보는 관점이다(M. daly) 이러한 견해는 여성의 다중성, 확산성, 유동성과 개방성 등을 여성문화의 특성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여성문화에 대한 정의는 아직은 모색의 과정에 있지만 점차 기존의 여성문화가 지닌 특수성을 재평가하고 여성의 주체성을 발전시키려는 관점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 여성문화권의 탐색을 위해서는 농촌지역 여성들이 스스로 가부장적 질서에 도전하면서 무엇인가 여성들이 빚어내는 여성적 쾌락과 새로운 윤리감의 생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살펴봐야 하지만 현재 농촌지역 여성문화권에서 이러한 시도를 찾아본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농촌지역 여성문화가 처한 시설 및 이용현황을 점검함으로써 여성문화권의 최소한의 접근을 탐색하면서 방향을 모색하도록 한다.

### 1) 농촌지역 문화시설 및 접근권 현황

지역문화는 주로 지리적 환경에 의해 형성된다. 즉 산맥이나 강과 하천 등의 지리적 여건이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문화는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문화이다. 그러나 이는 문화의 형성을 구성하는 요소이고 실제로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권의 문제에서는 지역과 수도권과 문화격차 문제는 시설과 인력 양쪽 측면 모두에서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도 농촌지역의 문화지표 기준을 문화시설 현황과 문화프로그램의 향유에 있어서 문화격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문화지표에 대한 질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문화행위 주체들 간의 문제, 전통문화가 어떻게 새로운 문화로 대체되어가는지 문화변동의 요인과 현황을 분석해야 한다. 특히 문화의 행위주체인 대상자들의 욕구가 어떻게 표출되고 실현되는 통로가 무엇인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양적인 문화격차 및 문화향유의 권리로 제한하여 살펴보았다.

문화격차나 문화향유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문화권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문화주의적 관점에서 문화적 권리를 접근하는 기본이다. 농촌지역 여성문화권을 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유는 현재 농촌지역 여성들의 문화적 권리를 제시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농촌지역에서 문화에 대한 접근권(기회부여) 그 자체가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고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 하에서 여성은 문화의 소비영역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대상이긴 하지만은 막상 문화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거나 문화를 평가할 권리는 부여되지 않는다(이수연 외, 2005). 이러한 요인은 실제로 여성들이 사적 공적 영역에서 많은 문화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화활동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해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취향을 인정하고 즐길 권리인 문화권을 제기하게 된다.

### (1) 문화시설 향유 현황

농촌지역에 시단위를 제외한 군단위에 여성관련 문화기관으로는 여성회관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나, 그러나 현재 군단위에 여성회관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50% 정도). 반면 대도시의 여성관련 문화시설은 공적인 영역인 여성회관,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백화점 문화센터, 학교의 평생교육센터 등 공적, 사적영역에서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 여성문화센터 기능을 하는 곳은 시·군 단위 농협의 여성관련 교육과 군 농업기술센터의 취미교실, 생활개선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면단위 시설로는 희소하지만 여성농업인센터<sup>3)</sup>가 있을 뿐이다. 최근에는 농어촌에 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이 급증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군단위로 1개소씩 설치 운영되고 있다<sup>4)</sup>.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도 엄밀히 말하면 전적으로 문화시설로 구분하기는 예매한 현황이다.

여성문화권의 기본인 문화시설 접근권은 여성농민들의 문화시설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얼마나 열악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농림부에서 실시한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참조하면 여성농업인들이 1년 동안 시군구민회관의 경우 11.8%로 이용율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복지회관으로 6.7%의 이용율을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회관은 4.6%, 도서관은 1.3%에 불과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여성들의

3) 여성농업인센터는 2009년 현재 전국에 47개소(전남 4개소)가 있다.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아직 없는 군도 상당수 존재한다. 전남의 경우 현재 22개 시·군 중에 13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시·군·구민회관의 경우 13.5%가 이용경험이 있으며 복지회관의 경우 8.3%이며 도서관은 12.3%로 나타나 국민일반의 문화시설 이용율이 도시에 비해서 농촌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문화시설 이용률 및 이용횟수

	여성농민(2002)		일반국민(2000)	
	이용률(%)	이용횟수(회)	이용률(%)	이용횟수(회)
시군구민회관	11.8	0.38	13.5	0.63
문화예술회관	4.6	0.10	14	0.36
복지회관	6.7	0.49	8.3	0.55
공공도서관	1.3	0.08	12.4	1.37

자료: 농림부 「200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촌지역의 문화시설 현황을 보면 문화시설 공간은 운영주체에 따라 공공형, 민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형 문화시설은 군단위 문예회관, 도서관<sup>5)</sup>, 문화원 등이 있으며 면단위 문화시설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여성회관,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이 여성문화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민간형은 도시에는 백화점 문화센터, 기타 전문학원, 민간기관 등이 많지만 농촌지역의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현대인의 문화향유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화관은 군단위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과거 70년대까지는 군단위 극장이 존재하였음). 현재 군단위에서 지역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설립된 문예회관은 본래의 목적인 문화공연이나 전시 보다는 지역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90년대 들어 문화복지주의를 목표로 ‘모든 국민에게 문화를 제공’한다

5) 전남의 경우 목포 2, 여수 4, 순천 3, 나주 3, 광양 3, 담양1, 곡성 2, 구례 2, 고흥 2, 보성 3, 화순 1, 장흥 1, 강진 1, 해남 2, 영암 3, 무안 2, 함평 1, 영광 2, 장성 2, 완도 3, 진도 1, 신안 2(운영 시군청 26개, 시·도교육청 20개)



는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정책이 실시되면서 지역의 문화원, 문화회관 등이 건립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관점은 문화의 주된 참여자로서 성 주류화 관점이 반영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공간구조물의 획득 차원에서 문화시설 확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현황에서 고려되어야할 점은 도시의 경우 상업적 문화시설인 극장,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 동별 복지관, 여성회관, 백화점 문화센터, 갤러리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존재하지만 농촌의 경우 이러한 시설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비교통계에서 빠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촌지역 여성의 문화권은 시설의 양적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절대적인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2006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실태조사<sup>6)</sup> 결과에서도 40대 이하 농촌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연간 가족여행을 한 번도 가지 못했다는 응답이 26.3%로 매우 높다는 점을 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 여성들의 문화권 확대를 위해서는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2) 문화관련 프로그램 행사관람 현황

2003년 농림부의 여성관련 통계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2년 1년 동안 문학행사나 전시회, 국악, 민속놀이 공연, 음악공연, 연극, 영화, 무용공연, 연예 공연 등의 문화행사를 관람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여성농민들의 84%가 관람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통계는 2000년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발표한 문화행사 참석율이 전체 여성의 경우 54.8%라는 응답에 비교해 볼 때 여성농민의 문화행사 참석율은 전체 여성의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6) 농업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서, 2006, 여성사회교육원.

문화행사 참석비중을 연령대별로 분류해보면 <표 3>과 같다. 여성농민들이 문화행사 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저연령층의 참석율은 비교적 높고 고연령층 일수록 참석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여성에 비해 농촌여성의 문화행사 참여도가 낮고 농촌여성들 내부에서도 나이가 많을수록 참여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도시보다는 농촌이 농촌에서도 고령여성의 문화권이 가장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 여성문화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도시-농촌의 격차만이 아니라 농촌지역 내부의 세대간 격차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표 2〉 여성농민 연령대별 문화행사 참석율

세대	행사참가비율
39세 미만	34.9%
40대	26.1%
50대	18.2%
60대	10.5%
70세 이상	6.1%

자료: 농림부 「200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현재 농촌지역에서 운용되고 있는 문화관련 현황을 문화시설과 문화행사, 문화관련자를 중심으로 문화의 생산, 유통, 소비라는 3개 영역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농촌지역 문화기반을 분류하는 기준은 정기적인 형태의 문화운영 기관을 중심으로 나누었고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축제나 최근 증가하는 마을단위 개발사업의 일환인 문화체험, 마을축제 등은 제외하였다.

농촌지역 여성들의 문화권인 문화향유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지표는 별로 없다. 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나 문화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성별통계가 거의 작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노인

의 문화서비스 연구, 청소년의 문화서비스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문화의 소비자로서 대중이라는 무성적 인식의 결과이다.

〈표 3〉 농촌지역 문화기반

	생산	유통	소비
문화시설	문화원, 여성회관, 군민회관, 농업기술센터 등	교류 (정보거점, 예술가촌)	향유 (극장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행사	예술창조프로그램 경연대회, 예술상 등	교류유통프로그램 페스티벌, DB구축	공연전시프로그램 레파토리, 컬렉션, 축제
문화관계자	예술교육 프로그램 예술가, 기술자, 기획사	인적네트워크 (프로듀서, 큐레이터)	기획제작 시스템 감상단체

문화시설 중 가장 많이 향유되는 대중문화는 영화이다. 그러나 영화 상영을 위한 극장이 있는 군단위는 한곳도 없다. 따라서 농촌지역 거주민들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인근 시단위 극장을 이용하거나 대표적인 대중문화 향유 마저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즉 문화가 생산 되는 거점의 기능이 희소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은 극장 등의 대중문화를 소비할 세대가 농촌지역에서 사라져 버린데 기인한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2004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해주는 결과가 보여졌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여성들의 문화예술행사 관람에 관한 조사결과 강원도와 전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문화예술 행사 관람 비중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 남:여성의 성비가 89.8%로 조사되었고, 전남의 경우 97.0%로 나타났다. 이는 섬이나 산골,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문화행사 수혜비율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농촌지역의 문화생산은 현재로서는 외부의 유통구조에 의해서 창출되는 소비층이 없이는 어렵다. 농촌지역 문화생산자로서 주민의 역할은 과거의 경우 삶의 양식으로서, 공간적 구분을 지닌 지역성이 반영된 문화의 생산과 표현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전통의 재현(농악놀이, 지역축제에 참가 등)에 부분적으로 국한되어 있고 새로운 문화 생산자로서가 아니라 기존 문화의 명맥을 잇는 역할로 축소되고 있다. 지역의 문화행사 역시 군민의 날, 지역축제 등에 관람자로 참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문화관계자들 역시 외부에 존재하는 전문가나 문화산업의 경영자인 이벤트사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문화의 생산은 농촌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농촌지역 내 주민들은 문화의 단순소비자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축제나 지역의 문화행사는 이벤트사에 의해 획일화 되어 있다. 특히 방송사를 불러서 실시하는 ‘노래자랑’은 모든 축제행사나 지역문화 행사의 단골 이벤트이다. 누가 문화를 창조하는가는 결국 누가 문화관련 기획을 생산하고 참여하는가 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 2) 농촌지역 여성문화권 전망

1979년 12월 UN협약에 의하면 여성차별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한국인권재단, 2000: 644). 따라서 여성문화권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도·농간의 문화격차만이 아니라 농촌지역 내부에서 성별격차를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

### (1) 인구통계학적으로 본 농촌인구 현황

농촌지역 문화권은 농촌지역의 공동화현상과 결부되어 파악되어야

한다. 이는 문화가 갖는 산업적 특성에 의한 문화산업적 측면에 의해 지역문화가 점유되고 해체되며 생산되는 과정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처럼 문화가 행위주체의 표현으로 창출되는 구조에 비해 근대의 문화는 타율화되고 획일화되는 근대적 자본운동의 지배력 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문화를 변동시키는 기초적인 요소로서 문화구매력을 좌우하는 인구통계학적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문화가 단순히 인구통계학적인 구매력이라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 환경, 이데올로기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문화주의적 접근권을 이해하는데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노령화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농업의 쇠퇴로 인해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농촌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농림부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은 2000년 21.7%에서 2010년 34.4%로 전망하고 있다.<sup>7)</sup> 농가인구 중 여성비율은 181만 명으로 55.2%에 이르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농촌지역 인구특성의 또 다른 변수는 다문화가족의 증가이다. 현재 농촌지역에서는 전체 결혼인구의 10명중 4명이 국제결혼(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일 정도로 국제결혼이 가속화되면서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보면 농촌지역은 향후 노령화, 여성화, 다문화가족 증가 현상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현재 농촌 지역인구는 전체 인구의 18%이고 농가인구는 전체인구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농어촌지역에 대한 정책보고서에는 향후 18%의 인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으나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단의 인구유입정책이 없다면 향후 농어촌지역 인구추계는 2014

7) 농림부, '제2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 시안, p15 참조.

년에는 13%내외로 축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 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추계로 볼 때 농촌 지역의 문화적 공간이나 전통문화는 상대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축소될 가능성이 더 크다.

〈표 4〉 농림업취업자 추계

(단위: 명, %)

단위	2000년			2010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15-19세	3,000 (0.3)	1,000 (0.1)	4,000 (0.2)	3,030 (0.3)	325 (0.1)	3,355 (0.2)
20-24세	16,000 (1.3)	2,000 (0.2)	18,000 (0.8)	4,314 (0.5)	435 (0.1)	4,749 (0.3)
25-29세	27,000 (2.3)	11,000 (1.0)	38,000 (1.7)	5,417 (0.6)	821 (0.1)	6,238 (0.4)
30-34세	41,000 (3.4)	23,000 (2.1)	64,000 (2.8)	16,996 (1.9)	1,565 (0.3)	18,561 (1.2)
35-39세	69,000 (5.8)	57,000 (5.2)	126,000 (5.5)	27,206 (3.1)	10,540 (1.7)	37,746 (2.5)
40-44세	98,000 (8.2)	85,000 (7.8)	183,000 (8.0)	39,588 (4.5)	19,506 (3.1)	59,094 (3.9)
45-49세	115,000 (9.6)	112,000 (10.3)	227,000 (9.9)	70,478 (8.0)	47,516 (7.6)	117,995 (7.9)
50-54세	130,000 (10.8)	118,000 (10.8)	248,000(1 0.8)	111,364 (12.7)	78,640 (12.6)	190,004 (12.7)
55-59세	163,000 (13.6)	173,000 (15.9)	336,000 (14.7)	140,111 (15.9)	111,743 (17.9)	251,854 (16.8)
60-64세	215,000 (17.9)	214,000 (19.6)	429,000 (18.7)	171,655 (19.5)	126,668 (20.3)	298,324 (19.9)
65세 이상	323,000 (26.9)	294,000 (27.0)	617,000 (26.9)	288,369 (32.8)	225,109 (36.1)	513,479 (34.2)
합계	1,200,000 (100)	1,090,000 (100)	2,290,000 (100)	878,528 (100)	622,868 (100)	1,501,399 (100)

자료: 제2차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농림부, 2005).

## (2) 농촌지역의 가부장성으로 인한 문화권 제약

농촌사회의 특징은 소규모 지역사회이며 외부환경에서 정보유입이나 변화가 더디고, 연줄망에 의존하는 사회관계 때문에 이러한 외부환경으로부터 원천적 외부자인 여성들은 지역사회 연줄망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동범위나 삶의 양식이 기존에 형성된 지역사회의 문화적 규범의 규제를 받는다. 이러한 농촌현실에서 여성들의 문화권은 독자적 영역이나 형태로 구조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농촌지역의 문화는 대부분 향토사학자나 문중(성씨중심)의 반가 문화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와 분리된 문화는 파편적인 프로그램으로 존재할 뿐 전통영역을 제외한 새로운 문화권의 형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새로운 문화권의 형성 역시 도시의 문화프로그램을 농촌지역에서 운영하는 공간적 이동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여성농민의 문화권의 범주가 마을이나 면을 벗어나기 어렵고 마을의 규제를 받는다(오미란, 2004: 230).

농촌지역의 문화특성 중의 하나는 변화를 싫어한다는 점이다. 변화=질서해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농촌에서 문화는 지역사회의 권력이 작동하는 하나의 연줄망 체계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 전통문화의 구성은 가부장적 질서를 작동하는 권력기제임과 동시에 문화의 행위주체에 대한 '배제'와 '허용'이라는 전략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들이 문화의 행위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철저히 '배제'되는 전략이 사용되고 자신들의 기존 가부장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능들은 '허용'되는 방식을 선택한다.

농촌지역에서 문화를 통한 여성들에 대한 권력행사 방식은 지역개발 전략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여성 인력의 필요성이나 지역개발에서 여성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지역문화를 상품화 할 때 여성이 문화

의 생산자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통적인 가부장 문화를 상품화 할 때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순노동자로서 여성의 참여가 '허용'된다. 그러나 여성들 스스로 다른 문화를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방식은 '통제'되거나 '배제'되기 십상이다.

여성농민의 이러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여성농민들은 전통문화의 계승에 있어서 중요한 담지자 역할을 하고 있고 여성농민의 재생산의 단절로 전통문화가 사라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과거에 가부장적 지배질서의 유지를 위한 상징, 전통 등에 대한 금녀(禁女)<sup>8)</sup>의 영역이 최근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마을개발 등의 영향으로 가부장성의 일환이었던 전통음식이나 전통의 재현 등은 부분적인 상품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비로소 지역사회 문화나 규율의 유지라는 수동적 참여자에서 능동적 해방자로서 지역전통 문화의 주체성을 담지한 행위자로서 위치를 획득하기도 한다<sup>9)</sup>.

### 3. 농촌지역 여성문화 활동의 현황

#### 1) 농촌지역 여성문화 활동 유형

문화의 사각지대 농촌지역에서 여성들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문화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글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재 문화관련 활동의 행위자로서 실현되는 문화활동의 현황을 중심으로 농촌지역 여성들

8) 마을 동계에 여성의 참여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거나 마을 전통계승에 여성을 참여시키는 등의 변화가 있음.

9) 경북 지역의 종가집 문화체험, 경남 고령 개실마을의 전통한과 제조체험, 전라도의 한옥체험 등 문화의 관광상품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 형성하는 문화양식을 구분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농촌지역 여성들의 문화행위자로서의 활동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지역문화의 전통적인 영역에 수동적인 참여자로서 문화활동.

농촌지역 여성들의 문화활동의 가장 보편적인 유형인 수동적인 참여자로서 문화행위로는 마을의 당제나 행사, 지역 내의 문화행사에 음식을 담당하거나 자원봉사정도의 역할로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으로 나타난다. 농촌여성들이 참여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문화의 테두리를 계승하는 범주에서 주로 음식이나 문화행사의 단순참가자로서의 활동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농민들이 전통문화의 적극적인 계승자로 참여하는 시도를 하기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예는 남성들(동네어르신)의 승인이라는 제한적 범주 내에서 실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sup>10)</sup>. 이와 비슷한 연구사례로 제주도 ‘잠녀’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도 보면 잠녀문화 개발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생산과정에 실제 문화의 담지자인 잠녀들과의 회의는 20차례 중 단 2회에 불과한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이수연 외, 2005). 또한 전국 3대 반촌으로 손꼽히는 전남 영암 구림마을의 경우 대동계사라는 한옥 건물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대동계에는 남자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대동계사 건물 안에 여성의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제한되고 있지만 최근 건물을 민박기능으로 개편하면서 음식 등을 준비하는 행랑채 까지만 여성참여가 허용되고 있다.

10) 전통문화 계승에서 여성의 참여는 최근 들어 부분적으로 허용의 폭이 증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허용은 전통문화의 주체는 남성이고 여성은 보조적인 역할로 제한하고 있다.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은 기능적 역할만을 허용 받는다(음식, 풍물 등- 당제의 제주나 문화기능의 전승자는 여전히 남성임).

둘째, 적극적으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지역문화 만들기를 시도하는 활동.

이러한 유형의 여성문화 활동은 주로 읍단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어머니 독서회’ 나 ‘생협운동’ 등을 통해서 점차 확대되어 백일장, 그림전, 독서의 밤 등의 문화행사 생산자의 역할로 확대되기도 하지만 농촌여성들의 지배적인 문화활동 양식은 아니다.

해남의 고정희 추모사업, 남양주의 바리데기 축제 등 다양한 지역에서 지역발전과 문화, 관광사업이 연계되면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문화권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등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로 드러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축제생산자들이 지역여성이라기 보다는 지역행정과 결합된 문화산업 기획자들에 의한 문화산업적 시각에서 상징과 설화에 근거한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한 축제일 뿐 문화생산자로서 여성참여 기회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sup>11)</sup>

셋째, 농촌지역 여성들의 구성의 다양성에 근거한 문화권의 태동.

농촌지역의 통혼권이 확대되면서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다. 50대 이상의 경우 대부분 지역 인근에서 결혼해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인구의 구성층이 지역정체성을 그대로 담지하고 있지만, 최근 여성인구의 구성은 외지인들, 외국인 여성들로 다양화 되면서 문화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문화 알리기, 지역의 외부에서 시집온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새댁모임 등 공동체의 외부자들이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화 되고 있다(해남의 베트남 축제, 지역축제 개최시 외국인 문화 소개 코너 등). 이러한 현상은

11) 여성문화 축제의 상징으로는 바우덕이, 바리데기, 만덕할멈, 영등할멈, 논개, 허난설헌, 신사임당 등이다.

문화적 생존권의 시각에서 다원주의에 대한 요구, 지속가능성, 생태중심성이라는 가치의 전환과 더불어 진행되어야만 근본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문화적 생존권의 시각에서는 주로 약소문화, 소수문화와 관련된 접근으로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문화적 생존권은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증대에 따라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점점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문화 가족 여성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문화활동 유형은 한국의 전통문화 익히기, 음식배우기 등의 일방적인 한국문화 습득의 형태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최근 진정한 다문화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성찰되면서 한국문화 속에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생존권 문제가 부각되면서 우리문화 속에 다문화의 새로운 접목이나 생산을 위한 시도들이 새롭게 모색되고 있다.

## 2) 농촌지역 여성관련 문화활동 지원강화 영역 모색

기타 문화주의 시각에서 여성문화권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실제로 작동되는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농민을 대상으로 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취미 교육은 농협, 농촌진흥청, 여성농업인센터, 평생교육기관,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은 무료와 유료로 나뉘어 지고 실행기관으로는 시·군 여성회관, 군단위 농업기술센터, 문화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주로 읍단위에 존재하고 있고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취미, 교양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도시에서 일상으로 행해지는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전수하고 있어서 전통적인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지역여성의 문화창출이라는 생산적 측면은 결

여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문화욕구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핵심으로 접근성이 강화되어야 한다(오미란, 2004: 129).

접근성에 대한 지적은 단순한 거리적 접근성만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문화센터 등 근거리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야 하며 여성문화 행위주체인 여성들의 삶의 조건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농민의 삶의 특성상 농한기, 생애주기(세대-고령이 높음), 거리접근성(이동수단 여건이 열악함) 등의 제약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인을 반영한 해결방안으로 공간적으로는 거리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여성농업인센터나 주민자치센터, 면단위 농협 등 기존 시설을 통해 여성들의 생애주기에 맞는 프로그램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하는 문화서비스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2006년 전국 농촌여성 중 여성농업인센터에 아이를 위탁하고 있는 농촌여성 346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들이 농촌지역에서는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 대부분 여성들은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실시하는 문화프로그램에 참여율이 45.8%로 높게 나타났다. 참여프로그램은 문화, 취미프로그램 참여가 40.8%로 응답했으며 참여하지 못한 응답자들의 경우 '시간이 없어서'라는 비중이 높아 접근성만 고려되면 농촌지역의 많은 여성들이 문화적 향유를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촌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운영은 도시의 평생교육센터나 여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거의 없다. 여성농업인 센터나 여성회관 등에서 운영되는 여성관련 문화프로그램을 조사해 보면 노래교실, 댄스교실, 요가, 비즈공예, 염색, 한지공예 등 단순히 도시 일반여성의 프로그램을 공간이동 했을 뿐 지역의 정체성이나 농촌지역만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는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지는 않다<sup>12)</sup>. 특히 농촌지역에서 고령여성의 문화권은 거의 무시되고 있다.

고령여성들이 생각하는 문화=여행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대부분 마을 단위 관광여행은 농촌지역에 남아있는 변화된 문화양식이다.

최근 농촌지역에서 문화적 권리에 대한 표현은 생활양식의 변화에 기반한 사회적 권리 증진과 더불어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마을 내에서 건강센터의 활용이나 마을공간의 쾌적성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 시설의 확충을 통한 새로운 문화거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등산로나 산책로, 건강기구 활용, 겨울철 공동생활 등 노인세대들이 새롭게 형성시켜가고 있는 고령여성들의 문화권에 대한 욕구는 일차적 표현으로 건강권에 대한 욕구로 나타난다. 이러한 요인을 보다 발전시켜 다양한 마을개발 활동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직한다면 고령여성들의 문화권의 증대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 3) 여성문화 발전권을 위한 기초로서 여성문화유산 보존과 발굴의 중요성

지금까지 여성은 상당한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역사를 창조해 왔지만 남성 중심적 지배체계 속에서 여성은 적극적인 역사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여성과 관련된 각종 문화요소는 유산으로 충분한 가치를 부여받지도 못했다. 물론 역사의 장에서 여성의 존재가 완전히 무시된 것은 아니며 그들이 생산하고 계승해 온 문화의 일부 요소는 문화유산의 목록에 포함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성별 분리를 초월한 민족문화의 표상, 즉 물성적(gender-blind) 문화유산으로 인식되는 수준이었다(양애경 외, 2004: 3). 그 가치 역시 가부장제 질서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부여되었을 뿐, 남성지배적인 체계 속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12) 군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센터, 농협주부대학 등의 프로그램을 비교한 결과 문화프로그램의 차별성이 거의 없었음(한지공예, 솟공예, 비즈공예, 천연비누만들기, 수지침, 요가, 부부생활강연 등).

전개해 온 여성의 존재를 표상하고 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여성문화 유산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시간적 연속선상에서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습득, 계승한 문화적 요소 중 현재를 사는 여성들 사이에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부여받은 것이다. 즉 여성문화유산이란 역사주체로서, 문화적 생산자로서 여성의 위상을 표출하고 개인 또는 집단으로서 여성의 삶을 표상하는 유·무형의 상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새롭게 발견되거나 조망되는 여성문화유산에 대해서 그 자원이 지닌 가치를 단정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기 보다는 여성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언술이나 기술, 생산물 등의 현황을 살피고 그것이 오늘을 사는 여성의 삶과 어떻게 소통하고 작동하는지를 짚어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작업을 여성들의 주체적인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여성문화와 관련한 가장 큰 지역 내 문화인력 자원은 문화해설사들이다. 현재 양성된 문화해설사들의 성인지성은 매우 낮다. 문화해설사들은 기존의 가부장적, 남성중심적 지역문화를 이해하고 습득하여 구전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로 훈련되었을 뿐 지역 내의 여성문화를 주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창출해 나가는 작업은 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역 내에서 여성문화 유산을 창출하고 발굴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 관련 기관 및 정책과정에 여성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고, 둘째 지역문화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에 성인성을 반영하여 문화적 권리를 획득할 주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

유형의 문화유산으로는 여성과 관련된 유적지와 유물을 들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여성들의 공간, 생산 활동, 교육 활동, 종교 활동이 이루어진 공간을 들 수 있다. 최근 여성운동의 발전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공간 역시 여성문화 유적지에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혀 다른 성격의 공간으로 변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본래 면모조차 찾기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유의할 것은 여성문화 유산 가운데 역사상 여성들의 생산하거나 유통시키거나 했던 다양한 물건을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 이때 여성들은 기록보다는 구전전통을 통해 특정한 정보를 생산, 확대, 계승 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전전통은 여성역사문화 계승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분야이다. 또한 세대를 통해서 다양하게 구전, 전수해오던 기술, 기능, 지식체계 등은 여성들이 새롭게 발전시켜나가야 할 중요한 여성문화 유산이다. 여성들의 문화발전권은 바로 과거 여성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여성의 역사를 문화적인 측면에서 재건하고 이를 새로운 지역여성의 문화로 복원하는 것 역시 일상적인 문화권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이다. 여성들이 생산해온 직조, 연행, 공예, 음식, 놀이, 의례 등을 제대로 평가하여 사적인 삶, 사적인 범주로 행해진 의례와 여성의 삶이 공적인 문화로 재구성되고 생활문화의 영역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문화적 권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체적인 세력이 형성되어야 한다. 새로운 문화모델을 만들어가는 주체에 의해서 여성의 문화적 개입이 생산가 문화산업의 수용의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4. 맺음말

문화연구 학자들은 미래의 문화정책을 전통과 현대의 결합,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의 정립,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생활문화로의 접목, 주도문화와 부분문화의 균형(정철현, 2004: 356)으로 들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부르디외(Bourdieu)에 의하면 문화자본이 계급을 재생산하는 주요요소라고 할 만큼 문화는 경제적 불평등 못지않게 중요한 계급 불

평등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향유에 대한 권리(문화권)는 지역격차, 성별격차, 세대격차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의 형성에서 여성의 삶은 지역의 일상을 구성하는 그 자체이므로 지역발전에 여성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이 중요하다(한국여성개발원, 2006).

농촌지역 여성문화권을 문화향수권(기회확대), 문화지원권(문화지원받을 권리), 보호권과 발전권(지역의 특수성의 인정)이라고 규정할 때 현재 농촌지역은 여성문화권의 사각지대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 여성문화권의 획득을 위해서는 첫째, 문화적 불평등의 해소를 위하여 문화시설을 증대하고 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켜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문화권력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수문화(이주여성, 젊은 여성, 노인여성 등 다양한 하위문화 층위 반영)의 발전을 위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문화의 전승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전통문화의 보호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비영리 문화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지원과 문화조직 육성이 제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문화에서 여성문화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생산자 중심의 개발과 소규모 대안적 개발이 필요하다.

여성문화권 향상을 위해서는 첫째, 지역문화 시설의 확대(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내용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지역의 문화권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시설은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면단위 문화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찾아가는 문화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공공건물(학교, 농협,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간 활용)의 활용과 각종 문화관련 프로그램의 획일화를 극복해야 한다.



둘째, 지방 문화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다.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볼 때 문화권, 특히 소수계층인 여성농민의 문화적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기대하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농촌지역 여성들의 문화권의 강화를 위해서는 문화재정의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재정을 통해서 지역 내 소규모 문화 소모임의 적극적 활동을 유도하고 사라지고 있는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현재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원은 문화 전승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만 있을 뿐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임). 특히 여성문화에 대한 성인지성을 강화하여 전통적인 여성문화를 개발하고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남성중심의 들노래 발굴뿐만 아니라 여성중심의 노동요인 '밭노래', 여성의 삶이면서 생활이었던 전통적인 생활영역에 대한 보존과 개발에 필요한 성특정성 문화재정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셋째, 문화 전문인력의 육성이 필요하다.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전통을 계승하며 지역의 구성원의 구체적 이해에 입각한 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문화기능보유자, 문화행사기획자, 문화프로그램 운영자 등에 대한 문화 전문인력 육성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단순한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문화를 디자인 할 수 있는 문화기획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특히 여성주의적 문화기획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문화전문 인력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영역별 성차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관광 인력은 산업적 영역에서는 게임, 모바일, 인터넷 등에는 남성인력이 훨씬 많고 음악부분만 여성인력이 많은 성차가 드러나고 있다(이수연 외, 2005).

지역여성들의 문화권 향상을 위한 질적 측면에서 여성주의 문화기획자들의 육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도시중심적이고 서구중심적인 문화운동적 시각의 여성문화 생산자들의 문화는 농촌지역의 문화적 욕구와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의 다양한 특성 및 지역의 자원, 지

역여성들의 현실적 욕구를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문화기획 인력이 필요하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사회발전에 대한 문화적 접근의 등장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 새로운 접근은 ‘문화연구’의 측면에서 문화를 경제적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보는 문화산업론적 입장 및 문화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띠기도 하지만 근대에 대한 성찰, 신자유주의적 경쟁사회 및 자원의 약탈적 소비에 대한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생태론적 측면이나 공동체성 강화의 입장에서 대안 문화 창조의 유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문화적 권리에 대한 사회 인식의 강화의 표현이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문화권에 대한 접근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문화=생활양식’이라는 광범위한 특성에서 접근할 때 문화는 사회적 권리의 측면에서 접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구이면서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장으로서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여성문화권의 문제는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욕망/담론인 표현 주체로서 여성문화권의 실현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접수: 2009. 10. 13 게재확정: 2009. 11. 15)

## 참고문헌

- 강내희(2007), '문화권발전과 함의', 새세상연구소 기관지, 민주노동당.
- 농림부(2006), 『여성농업인육성 2차5계년계획 시안』, 농림부.
- \_\_\_\_\_(2003),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 농자원개발연구소(2004), 『2004 농촌생활지표 조사보고서』, 농업진흥청.
- 설준규, 송승철 역(1984), 『문화사회학 (레이먼드 윌리엄즈)』, 까치.
- 양애경 외(2004), 『여성문화유산의 현황과 지역문화자원으로의 활용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여성사회교육원(2006), 『여성농업인 교육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농업 ·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_\_\_\_\_(2006),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방안 연구보고』, 농업 ·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오미란(2007), "전통문화 계승에 있어서 성차", 『젠더와 사회』 Vol.6, 한양대학교 여성연구소.
- 이수연 외(2005), 『문화관광 정책의 성분석 및 성주류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정진성 외(2004), 『한국현대여성사』, 한울아카데미.
- 정철현(2005), 『문화연구와 문화정책』, 서울경제경영.
- 한국여성연구소(1999). 『새 여성학강의』, 동녘.
- 한국인권재단(2000), 『21세기의 인권Ⅱ』, 한길사.
- \_\_\_\_\_(2000), 『21세기의 인권Ⅱ』, 한길사.

〈Abstract〉

## Women's Culture Rights in Rural Areas

Mi-Ran OH

In the coming century, culture will be important for the competitiveness of all nations. However, there has not been enough research on how to improve the cultural rights of women in rural areas in the future. In order to address this blind spot, the following items need to be addressed: 1) the cultural gap between urban and agricultural areas needs to be narrowed; 2) support needs to be expanded for migrant women, young women, older women, and other underrepresented groups; and 3) traditional culture needs to be preserved in the face of new cultural innovations. Nonprofit organizations are imperative for supporting cultural diversification. In addition, small scale cultural development and support of traditional culture are important for women in various regions.

**Key words:** regional development, cultural gap, women's rights, cultural rights